

세계도시

2006. 8. 7 제148호

목 차

도시경영·경제

1. 12대 문화혁신 산업 클러스터 조성 (북경)
2. 국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동경都 나카노區)
3. 정부가 市에 폐기물, 문화, 도시계획 관련 권한 이양 (런던)
4. 인터넷에서 56종의 표준계약서 제공 (북경)
5.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시의원 수 감축 결정 (호주 리빙스톤샤이어市)
6. 정부 법률정보 시스템에 행정별 내용 공개 시작 (북경)
7. 도시에서의 서비스 성과 보고회 개최 (베를린)

복지·문화

8. 대형 슈퍼 출점 사업자에게 육아지원대책을 요구하는 조례 제정 (후쿠오카縣)
9. 고용 개선을 통한 저출산 대책 (일본)
10. 임신기간 중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해피 마더(Happy Mother) 조성금' 지급 (동경都 시부야區)

도시환경

11. 주택의 에너지등급 지정 의무화 (영국)
12. 열섬 대책 적극 추진 (동경)
13.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해 'CO₂ 다이어트 선언' 실시 (동경都 세타가야區)
14. 도시 미관을 위한 「우리집 화단 가꾸기」 안내서 발간 (런던市 켄싱턴 첼시區)
15. 온실가스 감축규제 법안 제출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州)
16. 주택에 소규모 풍력발전소 설치 의무화 검토 (영국)

도시교통

17. 거리환경 개선 프로그램 실시 (캘리포니아州 팔로알토市)
18. 건물 앞 거리환경 개선 허가제 실시 (샌프란시스코)
19.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절반 이상 감소 (런던)

도시계획·건설·주택

20. 도시계획 과정에 디자인지침 작성 의무화 (영국)
21. 州정부의 시드니 중심권 개발 직접 추진에 반발 (시드니)
22. 뉴타운 재생을 위한 검토안 작성 (동경都 타마 뉴타운)

1. 12대 문화혁신 산업 클러스터 조성 (북경)

북경市 조양구가 중국 11차 5개년 계획에 발맞춰 기획한 12대 문화혁신 산업 클러스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12대 문화혁신 산업 클러스터는 올림픽 현대체육문화센터, 조양공원 문화원, 산리툰(三里屯) 공인체육관 패션문화 거리, 북경 중심 상업·문화·미디어지구, 판자웬(潘家园) 고문화 민예품 상가지구, 온유하(温榆河) 환경생태지구, 북경 798 예술지구, 따환(大环) 문화원, 까오징(高井) 영상매체문화원, 까오비디엔(高碑店) 민속문화원, 산젠팡(三间房) 국제만화문화원, 북경 유락단지 등이다. 조양구는 5년 후에 이 문화산업단지들이 모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경市 조양구 12대 문화혁신 산업 클러스터 분포도

(www.bjd.com.cn/bjxw/qxxw/200607/t20060717_51014.htm)

>>> 전문가 검토의견

거대한 중국의 심장 북경市 조양구는 역사의 중심지이자 각국 영빈관이 소재한 중국외교의 중심지다. 왕징 한인타운이 있는 곳이기도 한 핵심상업지구로서 외국인의 선호가 높은 지역이다. 이곳에 중국 11차 5개년 계획에 의해 12개 분야의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역사·외교·상업 중심지로서 조양구의 문화산업지구로서의 잠재성은 별도의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다.

우리의 서울은 어떨까? 경복궁-북촌마을-인사동을 잇는 전통문화 네트워크를 포함해 대학로와 홍대 앞의 공연문화, 충무로의 영상·출판·인쇄산업이 있고 청계천을 따라가면 패션의 메카 동대문이 나온다. 서울도 4개년 계획으로 21세기의 핵심인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하겠다.

/최경규 도시경영부 연구위원(gchoi@sdi.re.kr)

2. 구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동경都 나카노區)

동경都 나카노(中野)區는 구민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 3월 '구민 공익활동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근거해 NPO, 자원봉사단체 등 구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區 부속기관인 구민공익활동추진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區가 결정한다. 보조금은 구민공익활동추진기금에서 지출하게 된다. 2006년 보조금 총액은 단체당 30만 엔(약 247만 원)을 한도로 200만 엔(약 1644만 원)을 계획하고 있다.

(www.city.tokyo-nakano.lg.jp/015/d00200006.html)

3. 정부가 市에 폐기물, 문화, 도시계획 관련 권한 이양 (런던)

2006년 7월 13일 루스 켈리 영국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성' 장관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 권한을 런던市에 이양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치권한 이양 여부를 심사해 개별 상황에 맞게 자치권을 확대해 왔다. 이번 조치로 런던시의회와 市 행정당국은 주택, 성인 직업훈련 관련 권한을 새로 추가했다. 도시계획 과정에서 런던市的 역할이 강화될 뿐 아니라 폐기물, 문화, 체육, 보건, 기후변화 관련 권한과 집행기관 이사 선정권 등도 확대될 전망이다. 런던市는 2000년 이후 직접 선거로 시의원과 시장을 선출했으며, 그간 혼잡통행료 정책 및 대중교통수단 위주의 교통체계 강화, 환경친화적인 정책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5439)

4. 인터넷에서 56종의 표준계약서 제공 (북경)

현재 북경市에서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과정에 계약서 사용 빈도가 낮고 계약서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일부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불평등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대규모 소비자 분규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북경市 공상행정관리국은 1999년 중국계약법 제정 후 유관기업연합회와 소비자협회, 법률 전문가, 언론 등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건축, 부동산 분양, 임대차, 조경, 식품, 여행, 실내인테리어 분야 등 56종의 표준계약서 샘플을 제정, 공개해 왔다. 그 중 여행 계약서, 전화가입 계약서, 분양 계약서 등의 표준계약서는 사회 각 분야의 호평을 받았으며 관련 분규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거래를 안정화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표준계약서 샘플이 매년 300만 부 이상 발행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시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경市 표준계약서 모음집이 발간되었고, 표준계약서 샘플을 북경市 공상국 홈페이지(www.baic.gov.cn/gcs/htc/sfwbdown/sample.asp)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표준계약서는 샘플이기 때문에 서명 전에 반드시 각 조항이 해당 계약에 적절한 것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www.hd315.gov.cn/chaxun/hongdun-1.asp?id=28984)

5.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시의원 수 감축 결정 (호주 리빙스톤샤이어市)

호주 퀸즐랜드 州정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좀더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행정시책 수립을 권고했다. 이에 리빙스톤샤이어市는 시의원 수를 9명에서 7명으로 감축하자는 안건을 제출해 시의회 승인을 받았다. Bill Ludwig 시장은 이번 시의원 감축 조치가 州정부로부터 인준될 경우, 시정운영이 원활해질 뿐 아니라 지역주민 또한 최소 10만 호주달러(약 7억 5000만 원)의 지방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州의원으로서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Carroll 시의원의 공석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어지면 7만 호주달러(약 5250만 원)의 지방세 절약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ABC news online, 2006. 6. 30)

6. 정부 법률정보 시스템에 행정별 내용 공개 시작 (북경)

북경市 정부 법제분과 사무실의 정보공개에 의하면 2006년 6월말 이후 정부 법률정보 시스템이 정식 가동됐다. 이 시스템은 市 법제기구 및 담당자 정보와 통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내용과 통계, 행정별 내용과 통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市 법제기구와 담당자에 대한 정보 및 통계는 보고에 근거해 매년 갱신되어 공개된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내용과 통계 서비스를 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안건의 기초 통계와 분석 보고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정부 관련 기관은 인터넷을 통해 정부 법률정보 시스템에 직접 보고내용을 올릴 수 있다. 각 항목은 보고 즉시 자동으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인공지능형 통계조사와 분석시스템이 가능하다. 해당 통계자료는 일반적으로 반년마다 한 번씩 갱신된다. 그 외에 행정별 내용과 통계는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되어 제공된다.

(www.bnii.gov.cn/xxhq/yndt/t20060706_134184.htm)

7. 도시에서의 서비스 성과 보고회 개최 (베를린)

많은 여행객이 베를린을 찾고 있어 호텔을 비롯한 여러 여행 관련 기업은 물론 문화와 레저설비 관련 기업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베를린을 찾는 여행객은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고 깨끗한 도시와 친절함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베를린 도시개발부가 주도하는 '2005 삶 속의 경제와 행정'의 'Service in the City' 제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몇 개 사업은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됐고, 다른 사업은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사업 파트너의 보고회가 7월 18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도시개발부 장관을 비롯해 사업 파트너인 IHK 대표 및 IHK 베를린 파트너 대표, 베를린 호텔 및 방문객 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607/nachricht2337.html)

한줄 뉴스

- 베를린市, 시청사 내 오래된 냉장고 400여개를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냉장고로 교체해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실천에 동참

<런던>

- 7월 4일 런던 '환경 초등학교' 시상식에서 환경문제에 앞장 선 초등학교 2곳 시상
 - 2006년에만 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런던 시내 701개 초등학교 24만 명 학생 참여
- 5년간 모은 기부금으로 시드컵(Sidcup) 지역 말보러 특수학교에 중증장애아를 위한 수치(水治) 요법용 수영장 개장
- 방치되어 있던 그리니치 밀레니엄 돔을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복합시설로 재활용 추진

8. 대형 슈퍼 출점 사업자에게 육아지원대책을 요구하는 조례 제정 (후쿠오카縣)

일본 후쿠오카(福島)縣은 일본 최초로 교외 지역에 출점하는 대형 슈퍼를 규제하는 ‘상업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해 2006년 10월부터 실시한다. 조례 실시에 앞서 후쿠오카(福島)縣은 대형 슈퍼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결혼·출산으로 퇴직한 여성의 재고용과 종업원용 탁아소 설치 등의 육아지원책 실시를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기업은 기초자치단체와 협의시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마을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에 근거해 자녀양육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조례는 매장 면적이 6000m² 이상 되는 점포의 교외지역 출점을 규제하는 것으로, 출점하는 기업에 미리 지역공헌 활동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후쿠오카(福島)縣은 이 지역공헌 활동 내용에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시켰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조례가 출점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시에는 가이드라인 준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후쿠오카(福島)縣의 움직임에 대해 자녀양육 지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한 획기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가 탁월한 지혜를 내놓았다고 평가하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한 과도한 규제 정책이며 지역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까지 기업에게 전가한다면 출점하려는 기업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朝日新聞, 2006. 7. 4)

9. 고용 개선을 통한 저출산 대책 (일본)

일본 후생노동성의 2006년판 「노동경제의 분석」(노동경제 백서)의 원안이 2006년 7월 15일 발간됐다. 20대 연령층의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해 수입 격차가 커져 젊은층의 결혼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저출산의 주요인으로 분석되어, 젊은층의 고용대책 중요성이 강조됐다.

백서에 의하면, 2002년 15~34세의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정규직 종업원의 경우 약 40%였는데 반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종업원은 10% 전후에 머물렀다. 1997년과 2002년의 비정규직 고용 비율을 비교하면 20~59세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 경향을 보였고, 특히 20~24세의 증가율이 1997년에 비해 거의 2배가 증가해 30%를 넘어섰다. 백서는 구체적인 젊은층의 고용 대책으로 직업능력 개발 등을 통한 젊은층 정규직 고용 촉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적 정비를 포함한 대처 등을 들었다. 후생노동성은 백서를 2006년 8월 초순에 내각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 2006. 7. 16)

10. 임신기간 중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해피 마더(Happy Mother) 조성금’ 지급 (동경都 시부야區)

동경都 시부야(渋谷)區는 자녀양육 지원책의 일환으로 임신기간 중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피 마더(Happy Mother) 조성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임신 24주가 지나 임산부 건강진단을 받고, 출산예정일이나 출산일 4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區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1회 임신에 5만 엔(약 41만원)을 지급한다.

(www.city.shibuya.tokyo.jp/kurashi/children/happy.html)

도시 환경

11. 주택의 에너지등급 지정 의무화 (영국)

영국 주택청은 영국내 모든 주택을 사고 팔 때 에너지등급 지정(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2007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을 매매하는 사람이 A에서 G까지 분류된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과 이산화탄소 배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에너지등급으로 주택의 난방비, 전기료, 온수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2007년부터 실시될 이 정책은 현재 여러 환경단체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2009년부터 유럽에서 실시되는 모든 주택에 대한 에너지등급 표시 의무화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Planning, 2006. 6. 14)

>>> 전문가 검토의견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단순한 홍보에 그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이다. 에너지비용이 기업의 경쟁력과 관계가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마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그다지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 중 기존의 에너지원보다 저렴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외면당하는 등 에너지비용이나 에너지이용 효율에 대해서는 부동산 개발업체도, 분양받으려는 수요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부동산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할 경우 기존의 구호성 에너지절약 홍보보다는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생활경제과를 중심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택용 건물뿐 아니라 업무용 건물도 포함해 기존 및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마련할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에너지절약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chohm@sdi.re.kr)

12. 열섬 대책 적극 추진 (동경)

동경都는 區와 연대해 열섬(Heat Island) 대책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보수성(保水性) 포장, 옥상 녹화, 벽면 녹화 등 각종 사업을 실시해 왔다. 2006년에도 동경都와 각 區는 열섬 대책 사업비로 총 32억 엔(약 2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쿨 타운(cool town) 모델 사업, 드라이 미스트(dry mist)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자 지원 사업, 쿨 루프(cool roof)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쿨 타운 모델 사업의 하나는 열섬 대책 추진 지역 내에 모델 거리를 선정해 거리 단위로 열섬 대책을 추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환경 완화 효과나 비용 대비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 평가하는 것이다. 인공 안개를 발생시켜 기화열을 통해 주변 기온을 낮추는 드라이 미스트 장치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이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다. 또한 동경都와 區가 연대해 설립한 쿨 루프 추진협의회는 옥상 녹화와 고반사율 도로 사용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쿨 루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경都는 2005년 4월에 23개區를 대상으로 열섬 현상의 발생 요인인 인공 배열(排熱)이나 지표면 피복상황 등이 대기에 끼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열 환경 지도'를 작성했으며, 이에 기초해 열섬 대책 추진 지역으로 4개소를 정한 바 있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7/20g7a2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도시의 열섬 현상은 주요한 환경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대기질 개선과 함께 도시 열섬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옥상녹화, 벽면녹화, 공지에 나무심기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도시 열섬보다는 대기질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07년도 연구사업으로 수행될 예정인 '기후지도 및 열 환경 지도 제작' 연구를 통해 서울시의 정확한 지역별 열섬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도시 열섬 대책으로 쿨 타운 모델사업이나 드라이 미스트 설치사업 등을 서울시의 특성에 맞게 고려해볼 수 있다.

/송인주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injusong@sdi.re.kr)

13.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해 'CO₂ 다이어트 선언' 실시 (동경都 세타가야區)

동경都 세타가야(世田谷)區는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 신 에코 라이프 대작전 '세타가야 區 CO₂ 다이어트 선언'을 실시하고 있다. CO₂ 다이어트 선언이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CO₂를 다함께 줄이려는 활동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대책 중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해 그 내용을 선언하는 것이다.

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9가지 대책에 대해 '실천하겠다', '이미 실천하고 있다', '유보하겠다'의 3가지 답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구청에 알리는 형태다. CO₂ 다이어트를 위해 세타가야區가 제시한 9가지 대책은 샤워, 조명, 냉장고, 텔레비전, 비디오 플레이어, 에어컨, 가스레인지, 세면장, 쇼핑에 관한 것으로 각 항목의 실천방법과 절약효과를 설명해 놓았다. 이 운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민은 선언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www.city.setagaya.tokyo.jp/020/d00008373.html)

14. 도시 미관을 위한 「우리집 화단 가꾸기」 안내서 발간 (런던市 켄싱턴 첼시區)

유럽하면 떠오르는 오래된 건물과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화단이 있는 고풍스러운 거리 풍경도 지역 주민의 참여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런던의 대표적인 부촌인 켄싱턴과 첼시 지역을 관할하는 켄싱턴 첼시區(The Royal Borough of Kensington and Chelsea)는 지역 주민이 손수 집 앞 화단을 가꾸면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조성할 뿐 아니라 빗물을 흡수해 지역 기후 변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소규모 화단을 만들 때 필요한 기구와 조성 가능한 화단의 예(구체적인 식물과 배치도 등 포함) 등의 정보를 담아 「우리집 화단 가꾸기」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공공 도서관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Front Gardens Matter, 켄싱턴 첼시區 발간)

15. 온실가스 감축규제 법안 제출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州)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州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강력히 규제하는 정책법안을 최근 州의회에 상정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 상정은 현재까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州가 유일하다. 새로 시행될 온실가스 감축규제 법안은 2002년 11월 교토의정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권고량을 훨씬 초과해 규제하고 있으며, 십수 년 내에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州 전력 총량의 20%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정한 온실가스 감축법안은 현재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호주 ABC news online, 2006. 6. 30)

16. 주택에 소규모 풍력발전소 설치 의무화 검토 (영국)

영국 정부의 에너지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택에 소규모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고 지붕단열을 의무화하는 제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에서는 에너지소비 절약목표 달성과 지구온난화 방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풍력발전소 설치 등의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는 에너지공급 회사에 의무화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 회사가 영국 각 가구에 지붕단열과 소규모 풍력발전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자 하는 내용도 이 제안에 포함되어 있다.

(Planning, 2006. 7. 3)

<북경>

- 대책란 지역 동사무소, 10만 위안(약 1250만 원) 들여 주민들의 집에 '금속제 안전문 달아주기' 운동 실시
- 선무구 문화재 관리위원회, 민속 무형 문화유산 등록작업 완료 후 인터넷에 공개 예정
- 수도박물관, 노인 및 학생 단체 관람객을 위해 무료입장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일반인 대상으로 주 1회 무료입장권 배포

도 시 교 통

17. 거리환경 개선 프로그램 실시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市)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市는 캘리포니아 거리(California Avenue)를 걷기 좋고 매력적인 거리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목적은 거리환경 개선뿐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재원은 대도시교통위원회의 활기찬 지역사회를 위한 보조금과 지역사회 디자인·교통 보조금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쓰레기통, 거리상점, 벤치 등의 거리 어메니티 개선, 두 개 차로의 한 개 차로로의 통합, 좀더 아름다운 것으로 가로등 교체, 적합한 가로수 선택, 보행자 보행 편의를 고려한 거리바닥 개선 등이 있다.

(www.city.palo-alto.ca.us/public-works/ca-streetscaping.html)

18. 건물 앞 거리환경 개선 허가제 실시 (샌프란시스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市는 건물 앞 거리환경 개선에 대한 허가 신청을 받고 있다. 건물 주인이 건물 앞 거리에 대한 개선계획을 市에 제출해 허가를 얻는 것이다. 市는 이를 통해 매력적인 거리를 만들뿐 아니라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거리가 도시 전체 분위기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이는 도시 전체에 긍정적 외부 효과를 줄 뿐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와 거주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물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건물 앞 화단 만들기와 걷기 편한 거리 만들기 등이다.



건물 앞 거리환경 개선

(www.sfgov.org/site/sfdpw_index.asp?id=42766)

19.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절반 이상 감소 (런던)

런던교통공사는 1990년대 중반 연 평균 935명이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경상 제외)가 2005년에 절반 이상(62%) 감소했다고 밝혔다. 성인 사상자도 45% 감소해 2005년에 3650명으로 집계됐다. 영국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4~1998년 평균 사상자 발생 수를 2010년까지 성인은 40%, 어린이는 50% 규모로 줄여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교통안전 질서 확보에 노력

해왔다. 런던市는 중앙정부 계획치보다 강화해 성인 50%, 어린이 60% 감소 목표를 수립했는데 목표연도보다 4년 앞서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런던교통공사는 연 평균 5000만 파운드(약 877억 원)의 예산을 도로교통 안전 개선을 위한 시설 정비, 훈련 및 교육에 투입해 왔다.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8626)

도시계획·건설·주택

20. 도시계획 과정에 디자인지침 작성 의무화 (영국)

영국의 모든 도시계획 신청과정에 디자인지침을 함께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규가 2006년 8월 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정부 건조환경 감사원이 발표했다. 이 정책은 최근 연구된 디자인코드 개발 과 적용이 도시공간과 주거환경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정에서 디자인지침 작성 의무화는 앞으로 각 지방정부의 새로운 도시개발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도시개발지역과 다양한 개발업자 및 도시계획가가 관여된 경우에는 디자인지침 이 효율적인 결과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정책은 현재 진행 중인 영국 도시계획 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Planning, 2006. 6. 12)

21. 州정부의 시드니 중심권 개발 직접 추진에 반발 (시드니)

그동안 시드니市의 개발 제한규제에 묶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던 브로드웨이 일대에 대해 州정부가 규제완화와 더불어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토지 소유주와 개발업자는 반기는 반면, 무어 시드니 시장과 브로드웨이 인근 주민 및 연방 녹색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뉴사우스웨일스 州 정부의 사토 장관은 규제완화를 조건으로 개발권자에게 이 지역 상하수도 및 도로 건설의 대가성 기반시설 건립을 요청했으며,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을 고려할 때 시드니 시내 중심 슬럼지역인 이곳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2006. 6. 22)

22. 뉴타운 재생을 위한 검토안 작성 (동경都 타마 뉴타운)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1965년 도시계획으로 개발된 동경都 타마(多摩) 뉴타운이 이제는 '올드 타운화'의 문제를 떠안고 있다. 총 면적 28.9km², 인구 약 20만 명(2005년 10월 현재)의 타마 뉴타운은 1971년에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제는 대규모 단지 대부분이 노후화됐고, 입주시에 육아세대였던 주민도 고령화되어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주민 수가 22배 증가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초·중교 6개교가 폐교됐다. 약 4만 가구의 공공 임대주택이 재건축 시점에 있으며 재건축에 필요한 비용은 약 4700억 엔(약 3조 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2005년 구체적인 재생안 검토가

착수됐고 2006년 7월부터 약 3년간 뉴타운 개발 자료를 수집해 다른 지역의 뉴타운 조성에 참고가 되게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성은 향후 5년간을 재생을 위한 집중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고령화된 주민이 일할 수 있게 폐교 등의 유휴시설을 비즈니스나 창업 지원의 거점으로 바꿀 계획이다.

(www.yomiuri.co.jp/e-japan/tokyotama/news001.htm)